

日 금리인상 신호에 ‘엔 캐리 청산’ 우려… 금융시장 ‘비상등’

美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고
日 인상 무게… 금리격차 좁혀

한은, 엔 캐리 잔액 506.6조엔
청산가능 규모 32.7조엔 파악

빌린 일본 엔화를 갚기 위해 미국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신호가 엇갈리면 서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이 예측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4%를 가리킨다. 블랑케 사인 자산관리 회사 최고투자책임자 로버트 사인은 블룸버그에 “시장은 현재 소화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케빈 해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차기 연준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게 분명해지자 시장이 정말 반겼다”며 “시장은 연준에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인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을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켜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1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관세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올해 최저 임금도 역대 최고로 오르는 등 임금 인상도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선 BOJ가 이달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 발 관세전쟁의 충격을 우려해 올해 1월 이후 중단했던 ‘인상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신호도 감지된다.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제 금리(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진 것이 대표적이다. 금리 차이가 줄면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진다. 지난 1일 일본 10년물 국제 금리는 1.865%를 기록했다. 한때 연 1.875%까지 상승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5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기준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2년 만기 국제 금리는 연 1.020%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연 1%를 넘어섰다.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는 연초 연 4.

8% 코앞까지 상승했다가 1일 연 4.08%로 밀려났다. 그 결과 올해 초 3.5%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미국과 일본과의 국제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초반대로 좁혀졌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동반되다는 점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자극한다. 환 손실을 막으려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빌린 돈(엔화) 상환에 나설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엔과 유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99.41로 지난 1월 2일(109.24)보다 9% 하락했다. 이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면서다. 반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올해 초 158엔대에서 이달 1일 155.46엔대로 수그러들었다. 한때 달러당 155.4엔을 찍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결정하자 한때 달러당 157엔을 넘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청산 규모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은 ‘엔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 가능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엔 캐리 자금 잔액을 506조6000억엔(약 4768조원)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 중 6.5%인 32조7000억엔(약 308조원)을 청산이 가능한 규모로 파악했다. 스테

이트 스트리트 마켓의 매크로 전략 책임자 마이클 메트칼프는 “일본 금리가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수록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오거나 적어도 해외 채권 매수 규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국제 발행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제 금융의 핵심 공급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결정 이후 국제 금리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라며 “일본 국제 금리 급등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일본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은 22조8060억 원가량이다. 이들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다. 김찬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미국 국제 보유 규모는 2025년 1~9월 1100억달러 늘었고 영국 등 우방국 중심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크게 앞지르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성장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중장기 머니무브가 가능하나 현실점에 이를 예단하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소비자물가 2.4% ↑… 고환율에 먹거리 ‘썰렁’ 연내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가닥

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가격 전년비 5.6% 뛰어
환율상승에 석유류 인하 축소도 요인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

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잡쌀(34.2%), 굴(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수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굴은 잦은 비로 출하 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제’ 전격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경제·물가 장관회의
“식품 슈링크플레이션 뿌리뽑을것”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형 가격인상)’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용량 논란이 잦은 치킨 업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에서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며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제도에 따라 치킨 메뉴판과 배달·온라인 주문 화면에는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래프(g) 또는 ‘호(크기)’ 단위로 적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발시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회
정무위 강준현 “연내 법안 발의하게
10일까지 정부안 마련 강력하게 요구”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앞두고 여당이 연내 입법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12월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및 발행 요건 규율 ▲가상자산의 지위 정립 ▲가상자산 관련 공시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선진화’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마련됐다.

또한 여당은 오는 3일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일 정기국

회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조속한 법안 마련을 압박하는 한편,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 처리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발의된 ‘가상자산 선진화’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 간에도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

여·야 공감대에도 관련 입법이 미진했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금융위의 감독 권한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과 한국은행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은이 주장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간편결제 및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편, 높은 신용도를 갖춘 은행이 이를 담보해 높은 신용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할 바 없다”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당정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됐다”라며 언급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231@